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공동 지정

2022. 2. 18.

김 기 희 수석연구위원

● 목 차 ●

1.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공동 지정 추진 배경
2. 경제자유구역 개념과 지정 현황
3. 경제자유구역 정책 동향
4.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공동 지정 추진 배경

- 대전과 세종 국토의 지리적 중심지로서 과학경제와 행정 중심의 균형발전의 총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대전과 세종은 사실상 교통과 문화, 경제생활 공동체를 형성
 - 세종이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대전과 경제·산업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환경,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 생활권을 형성하게 되고,
 - 특히 주거와 출·퇴근 등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생활 경제권 벨트의 단일화 추세가 가속되고 있음

- 대전과 세종은 이러한 입지적 장점을 지역발전의 계기로 연계하고자 지난 수년간 대전과 세종, 나아가 충남, 충북이 중부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왔고, 최근에는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 합의하고 추진 중에 있음.
- 여기에 정부도 광역자치단체간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사업을 지원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 시·도간 행정통합 논의 : 광주·전남, 대구·경북
 - 메가시티 유형의 광역권 경제공동체 :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충북
- ☞ 메가시티 유형의 경제협력은 기존 행정체계는 유지하면서 지역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어 교통, 문화, 행정 등의 공동기반으로 지역의 미래 유망 특화산업 성장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생산을 촉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부가하는 유형의 사업임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공동 지정 추진 배경

-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대전시와 세종시는 최근 메가시티 유형의 경제공동체 형성,
나아가 경제통합을 촉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도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공동으로 조성하자는데 공감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추진키로 하였음.

-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공동 지정을 통하여
 - 대전과 세종이 우리나라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
충청권, 나아가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핵심도시로 자리매김

경제자유구역 개념과 지정 현황

1. 경제자유역의 법적 근거, 목적, 지정 요건

● 경제자유구역의 법적 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지정관련 규정 : 동법 제4조

● 목적 : 경제자유구역법 제1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경제자유구역 개념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방식으로 콘텐츠 집적을 통해 국제비즈니스도시를 조성함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

지정요건	세부 지정요건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부합성	발전전략 평가, 토지이용계획
기업입주 수요	개발수요, 기업 입주여건, 외국인투자 유치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 가능성	외국인 정주환경 조성계획
부지 및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투자확보 계획, 기반시설 조성계획
개발 경제성	토지조성원가, 개발효과
자금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	재원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타	추진체계, 조기실현 가능성

경제자유구역 개념과 지정 현황

● 지정 절차와 승인 :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

-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 요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절차

단계	내 용	관련 기관
1	개발계획 수립	시·도지사
2	주민의견 청취 (14일 이상)	시·도지사 (의견제출 시 검토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내 통보)
3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청 (개발계획 포함)	시·도지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4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개발계획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7	경제자유구역 지정사항 통보 (고시 후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8	경제자유구역 지정사항 주민 열람 (14일 이상)	시·도지사

경제자유구역 개념과 지정 현황

2. 조성내용과 지원

● 조성내용

- 경제자유구역은 산업·상업·물류·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개발 방식으로 15~20년의 개발 및 콘텐츠 집적을 통해 국제비즈니스도시를 조성함.

● 지원

- 개발사업에 대한 다양한 특례와 입주 외국인 기업에 관세 면제,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함
- 타 법상 적용되는 규제특례가 존재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법」 상 최혜규제가 적용됨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 3)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국유·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음 (「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4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경제자유구역법 제17조」)

경제자유구역 지입주기업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입주자격		국내기업, 외투기업
조세 감면	지원대상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소득세	2019년 폐지(2018.12.24.「조세특례제한법」개정)
	지방세	15년 이내 조례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2조의2 제4항 및 각 지자체 조례) (제조업 1천만불 ↑, 물류업 5백만불 ↑ 등)
	관세	5년간 100% 감면
입지지원		국공유지 임대 및 임대료 감면 (~50년, 50~100%)
규제특례		외국교육·의료기관 설립 등
		<외투기업 국한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고용, 유급휴가 배제 등 ·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 ·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경제자유구역 개념과 지정 현황

3.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지정됨

- 2003년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 2008년 : 황해, 대구·경북
- 2013년 : 동해안, 충북
- 2020년 : 경기 시흥 배곧, 광주, 울산

● 2022년 현재 총9개 구역이 지정·운영

- 총면적 : 285.53km² 규모
- 지구수 : 100개

(인천 32개 지구, 광양만권 23개 지구, 부산·진해 18개 지구, 대구 8개 지구 등)

※ 2019년 8월 기준 : 경제자유구역 입주 업체 수는 5,250개, 이 중 외국인투자기업은 316개로 전체 입주기업의 6% 수준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2022년 현재)

구역	위치	면적	지구	비전	지정일
인천	인천광역시	122.44km ²	32	환발해권 물류클러스터 추진	2003.8.6. (1차)
광양만권	전라남도, 경상남도	69.58km ²	23	동북아시아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육성	2003.10.27. (1차)
부산진해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51.07km ²	18	항만중심의 물류거점화 추진	2003.10.27. (1차)
황해*	경기도	4.36km ²	2	환황해권 국제협력 거점	2008.4.25. (2차)
		0.88	1	서해안시대 신성장동력 산업의 글로벌 거점 조성	2020.6.3. (4차)
대구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18.45km ²	8	지식기반산업중심 내륙형 경제자유구역	2008.4.25. (2차)
동해안권	강원도	4.8km ²	5	첨단녹색소재산업 육성으로 환동해권 경제중심지	2013.2.4. (3차).
충북	충청북도	4.88km ²	4	친환경 BIT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	2013.2.14. (3차)
광주	광주광역시	4.37km ²	4	상생과 AI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	2020.6.3. (4차)
울산	울산광역시	4.70km ²	3	동북아 에너지 허브	2020.6.3. (4차)
합 계		285.53km ²	100		

* 2008년에 지정된 경기 포승, 현덕지구에 2020년 시흥 배곧지구가 추가로 지정됨

경제자유구역 정책 동향

1. 1, 2차 기본계획

● 2003년 처음 도입된 이후, 경제자유구역 1.0시대 : 2003년~2012년

● 제1차 기본계획(2013~2022년)

- 개발활성화,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경제자유구역 특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8개 구역*을 지정·조성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2003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2008년)
동해안, 충북(2013년)

** 구역별 3개의 중점유치 업종을 선정,
충북은 항공복합단지, 바이오신약 및 의료기기클러스터

● 제2차 기본계획(2018~2027년)

- 1차 때의 개발 및 외자유치 중심 기조와는 달리 맞춤형 규제혁신,
입주기업 혁신성장 지원 등 국내·외 기업투자유치에 중점을 둠

● 제2차 기본계획(2018년)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

㉠ 경자구역 총면적을 360km² 이내로 관리하는 총량관리제 도입

* 경제자유구역 총 지정면적(2019년 8월 기준)은 275.58km²

㉡ 중점유치업종 관련 규제특례 발굴, 규제특례법 활용 선도사업 추진

경제자유구역 정책 동향

● 제2차 기본계획(2018년)에서 변경된 주요 내용

- ㉔ **중점유치업종도 구역별 3개 내외로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시·도별 주력산업 등을 고려 신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

* ① 미래자동차 ② 드론 ③ 에너지신산업 ④ 바이오 헬스 ⑤ 스마트 공장
⑥ 스마트 시티 ⑦ 스마트 팜 ⑧ 핀테크

- ㉕ **추가지정 제한에서 신산업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한해 추가지정을 검토**

● 경제자유구역 4가지 혁신방향

- ㉑ **외투유치 중심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및 혁신생태계 구축으로 역할 재정립**
- ㉒ **규제특례 지속 발굴, 선도적 허용 등으로 규제혁신 아이콘으로 조성·허용**
- ㉓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 첨단기업 등 투자 매력도를 제고**
- ㉔ **국가산업과 지역정책 및 경자구역 중점산업간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 조성**

2.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 · 목표 · 추진전략

비전 · 목표와 추진 전략

비전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추가 투자유치 60조원 : ('20.1) 55조원 → ('30) 114조원 ▶ 총 입주기업 1만개 달성 : ('20.1) 5,992개 → ('30) 10,000개 ▶ 신규 일자리 20만개 창출 : ('20.1) 21만명 → ('30) 41만명
추진 전략	① [운영방향] 개발·외투유치 → 혁신성장 중심
	② [인센티브] 외투·유턴 → 첨단·중점특화산업 국내·외 기업
	③ [규제혁신] 개발 중심 규제특례 → 투자 활성화 규제 혁신

* 2008년에 지정된 경기 포승, 현덕지구에 2020년 시흥 배곧지구가 추가로 지정됨

경제자유구역 정책 동향

3. 경제자유구역 2.0, 2030 주요 추진과제

● 경자구역 역할 재정립을 통한 신산업 발전기반 강화

-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초기지로서 역할 재정립, 중점특화산업 선정

- * (신산업 특구화) 경자법 제1조 목적에 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추가
- * (중점특화산업 선정) 국내·외 앵커기업 유치전략, 혁신생태계 조성 계획등

● 첨단·중점특화산업 중심으로 인센티브 운영

- 첨단 산업지구 지정 추진 및 국내·외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 * (첨단투자지구) 첨단 투자 수요가 있는 곳 중심으로 지정
- * (지방세) 첨단기술·제품·중점특화산업 투자기업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 * (입지) 수의계약, 임대료 인하 혜택을 첨단·중점특화산업에 확대
- * (보조금) 지방투자보조금 지원비율 우대, 중점특화산업의 경우 추가 우대

● 신산업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기반 마련

- 경자청 중심의 규제특례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기반 조성

- * (권한부여) 경자청에 규제특례지구 신청자격 부여, 신산업 규제혁신 업무 수행
- * (전주기적 지원) 경자청 주도, 신산업·기업 발굴, 컨설팅, 투자유치까지 체계적 지원

3. 경제자유구역 2.0, 2030 주요 추진과제

● 신산업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기반 마련

- 경자청 중심의 규제특례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기반 조성

- * (재정지원) 네트워크 구성, 디자인·마케팅·사업화 지원 등 혁신성장 프로그램 신설
- 사업비 : 21년 60억원 → 22년 60억원 → 24년 80억원, 4년간 총 280억원
- * (교육기관 집적화) 외국교육·연구기관, 집적화 및 유치, 우수인재·선진기술 적극 활용

● 경자구역 혁신 거버넌스 역량 강화

- 경자청·경자위 기능 강화를 통해 혁신성장 추진기반 구축

- * (경자청) 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직과 기능 개편, 청창 인사권 및 전문성 강화
- * (경자위) 주요 프로젝트 투자애로 해결, 분야별 전문위 운영과 전문성 제고

4. 경제자유구역 산업별 생태계를 활용한 발전전략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산업별 생태계를 활용하여 발전방향을 설정함.
- 제조업부문은 글로벌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 육성의 전진기지화 하고
서비스업부문은 세계적인 공항·항만 경제권 및 복합 리조트 중심 관광생계를 구축함

● 제조 : 글로벌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 육성의 전진기지화

산업	지역	현황	발전방향
바이오	인천	△세계 1위 생산능력 (56만t) △ 의 약 품 수 출 57.7%	△부지 확대(32만평), 연구에서 생산까지 전주기 밸류체인을 확보하여 세계 최고의 글로벌 바이오 혁신클러스터 조성 *(‘20) 규모 92만㎡, 생산능력 56만t, 매출 2조원, 고용 5,000명→(‘30) 규모 2백만㎡, 생산능력 100만t, 매출 15조원, 고용 20,000명
	충북	△6대 국책기관 △방사광가속기	△국제 네트워크구축, 신약 개발(50개 목표), 중소기업·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신약개발 집적화 전진기지로 육성
	대구 경북	△한미사이언스 등 투자 MOU 지속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19.8월)을 계기로 비대면진료 등 첨단 스마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산업	지역	현황	발전방향
바이오	인천	△세계 1위 생산능력(56만t) △의약품 수출 57.7%	△부지 확대(32만평), 연구에서 생산까지 전주기 밸류체인을 확보하여 세계최고의 글로벌 바이오 혁신클러스터 조성 * (30) 규모 2백만m ² , 생산능력 100만t, 매출 15조원, 고용 20,000명
	충북	△6대 국책기관 △방사광가속기	△국제 네트워크구축, 신약 개발(50개 목표), 중소기업·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신약개발 집적화 전진기지로 육성
	대구 경북	△한미사이언스 등 투자 MOU 지속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지정(19.8월)을 계기로 비대면진료 등 첨단 스마트 의료기기 산업 육성
모빌리티	황해	△40km내 국내 자동차 기업 40%	△모빌리티 클러스터(서울대·현대차 등 70여개 기관) 활용, 전기차·미래형 무인이동체 개발을 위한 혁신기업단지 구축
	광양	△포스코케미칼 포스IX 공장 등 유치	△양극재 생산 확대(5천톤→8.5만톤), 주요소재 생산공장과 연구소 연계,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 소재 산업 거점화
	부산 진해	△450여개 제조기업 △부산형 일자리	△전기차 파워트레인 생태계 조성, 제조로봇·조선까지 확대하여 400만대 수준(30년)의 전기차 핵심부품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신산업	울산	△수소 시범도시 △수소 규제자유특구	△연료전지·수소전기차·수소트램 등 수소 활용 확산 및 수소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적인 수소 선도도시 조성
	광주	△에너지기업 집적 △에너지융복합단지	△A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스마트에너지 산업 육성
	동해	△수전해 수소생산 사업 추진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7.6), 재생에너지 기반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수소 생산·활용 산업 육성

● 서비스 : 세계적인 공항·항만 경제권 및 복합리조트 중심 관광생태계 구축

산업	지역	현황	발전방향
물류	인천	△인천공항 기반 *화물 세계3위·승객6위	△스마트 물류프로세스 도입, 전자상거래 수요확대에 대응하여 GDC·플필먼트센터 등 첨단물류·신산업벨트 조성
	부산 진행	△부산신항 기반 *환적물량 세계2위 *물동량 세계6위	△동북아 물류 R&D센터·공동물류센터 건립, 배후단지 확장(31석→51석)을 통해 첨단 복합물류 플랫폼 구축
	광양	△수출입 물동량 국내 1위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 소재산업 등 지역거점산업과 연계하여 복합물류 기반 항만 경제권 조성
관광	인천	△국제공항 인접 △복합리조트 3개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3개), 청라 시티타워, 용유무의 해양관광 레저단지를 통해 동북아 관광 거점으로 육성
	광양	△다도해 자연환경 △인근 관광수요 *연 3천만명	△마리나 기반 복합리조트를 조성(1.5조원 투자규모) 중으로 힐링·해양스포츠 기반 남해안 관광벨트 거점 육성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1.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

- 대전과 세종이 가진 경제·산업적 장점
(대덕특구, 과학비즈벨트, 행정수도 입지, 신산업육성)의
높은 연계성을 기능적으로 활용, 지역혁신거점으로서 국내외 신산업 투자 촉진 필요
→ 대전·세종 중심의 중부권 산업육성과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
- 대전과 세종의 기업·산업간 긴밀한 가치사슬(Value Chain)관계 보유,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투자여건 개선 필요
→ 세계적인 글로벌 경쟁력 가진 기업 양산과 산업 육성 가능
- 대전·세종간 기업·산업 간 특허기술을 갖고 높은 산업 연계성을 바탕으로
입지계수가 높은 신산업 다수 입지
- 대전·세종지역은 미래 신산업 분야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혁신기업*들의 직접지
* 혁신기업 : 혁신형기업(매년 연구개발비 지출 기업), 혁신성장기업(고용,매출,연구비 동시 성장기업),
가젤기업(연평균 20%이상 성장기업)
→ 대전과 세종이 공간적 이격에도,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공동 협력할 경우
상생발전과 경제통합 가속화 가능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과 기대효과

1.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

☞ 결국, 대전과 세종의 연구개발 및 산업 입지적·기능적 보완·연계를 통해 권역내 경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경제통합과 글로벌 밸류체인 기술거점지역으로 도약 필요

- 대전과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 ① 대전·세종·충청권 상생협력과 경제통합의 전국 모범사례
- ② 혁신성장과 글로벌 밸류체인 기술거점도시로 도약 필요

2. 기대효과

● 혁신성장 거점 기능

- 국내·외 투자유치와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대전과 세종의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 형성과 혁신성장 거점으로 발돋움.

● 경제공동체 통합 마중물 기능

- 대전·세종 경제통합, 중부권 경제공동체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 기대

● 장기적으로

- 대전·세종 경제통합,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중부권 경제공동체

감사합니다.

ghkim@dsi.re.kr

우주정책 거버넌스 변화와 우주청 유치를 위한 전략

2022. 2. 18

대전세종연구원 양준석

CONTENTS

- »» I 우주산업 정의 및 현황
- »» II 우리나라 우주전략 거버넌스
- »» III 우주전담조직 설립 관련 쟁점
- »» IV 결론

1. 우주산업 정의 및 현황

I. 우주산업 정의 및 현황

1. 우주산업 정의 및 분류

- 우주산업은 고도의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집약적 산업으로 제반 산업간 연관 효과가 큰 산업으로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
- 우주산업은 발사체, 위성제작 등의 우주기기 제작, 위성 영상 등 우주서비스 및 우주기술이 파생된 간접우주사업으로 분류

* 스피노프 사례 : 고체 연료 로켓 기술 → 에어백 가스발생기, 우주비행사 식수 공급 장치 → 중금속 약취를 걸러주는 정수기

구 분		주요 유형
직접 우주산업	우주기기 제작	발사체·위성 제작, 지상국 운영 등
	우주 서비스	위성영상, 위성방송, 통신, 위성항법서비스 등
간접 우주산업		우주기술 접목 의료, 식품, 섬유, 제조 산업 등

I. 우주산업 정의 및 현황

2. 우주산업 동향

■ 우주산업의 중요성

- 주요 선진국들은 우주분야에서의 우위가 국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로 인식하여 국가적 지원 하에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주공간은 과학적 탐구와 군사적 이용 대상에서 상업적 활용과 민간인 관광 등으로 개발목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우주개발은 국가안보, 교통, 기상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적, 경제적, 군사적 파급효과를 가져옴.

■ 뉴스페이스(new space)

- 우주는 호기심의 대상에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전환
-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민간기업들이 우주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New Space 시대'로 접어들고 있음.

* 스페이스X(재활용 발사체 사업), 원웹(우주인터넷), 버진 갤러틱(우주여행), 블루오리진(우주여행) 등의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우주개발에 참여

I. 우주산업 정의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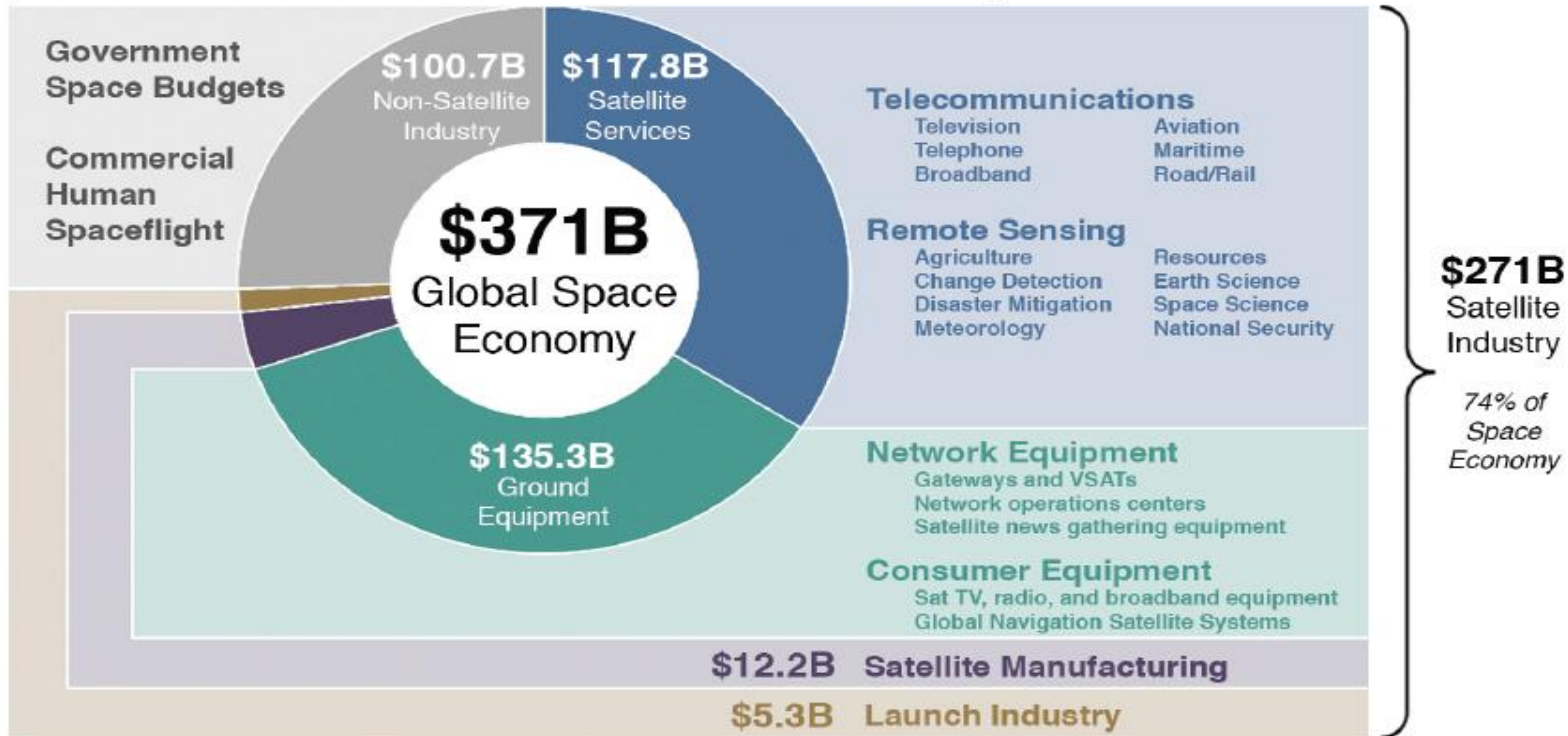
2. 우주산업 시장 규모

■ 글로벌 우주산업 규모는 3,710억달러로 추정(2010)

- 지상장비(위성TV, 네트워크망 관리) : 1,353억달러, 위성서비스(통신, 원격감시, 우주관측 등) : 1,178억달러, 위성 제작 및 발사체는 전체 시장의 7% 정도
-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3조 2,610억 원으로서 세계 우주산업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

The Satellite Industry in Context

(2020 revenues worldwide, in billions of U.S. dollars)



우주정책 거버넌스 변화와 우주청 유치를 위한 전략

II. 우리나라 우주전략 거버넌스

II. 우리나라 우주전략 거버넌스

1. 현황

- 우리나라의 우주전략 거버넌스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정책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가 사업을 집행하며, 항우연 등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체계

추진체계	내용	주체
정책	우주정책수립, 관련 부처간 조정 및 연계, 국제협력 정책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사업관리	우주사업기획, 예산집행, 우주사업관리, 우주산업진흥, 국가우주자산 등 우주 인프라운영, 우주국제협력사업 추진, 우주교육 및 대중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연구개발	위성체, 등 관련 기술 개발	항우연, 천문연, KAIST 등

* 황진영·김종범(2019)에서 인용

II. 우리나라 우주전략 거버넌스

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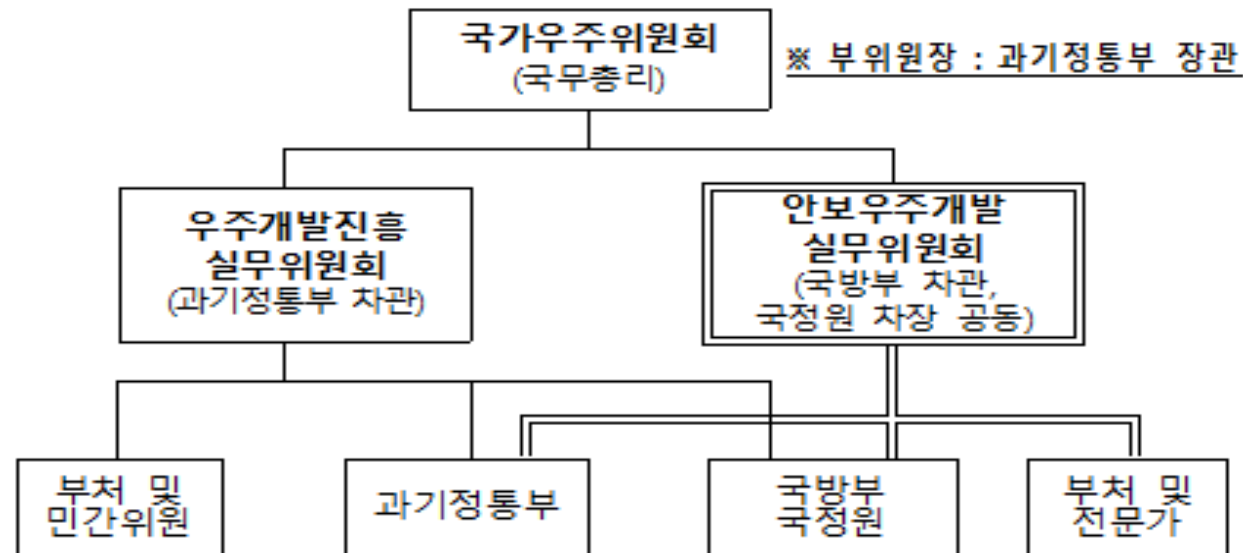
■ 국가우주위원회

- 국가우주정책 및 우주개발 주요현안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기구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

*국가우주위원회 주요 기능

① 기본계획 ② 기본계획 관련 정부 주요 정책 ③ 전문기관 지정 ④ 우주개발사업 이용·관리의 평가 ⑤ 자원 조달 등 ⑥ 발사체 발사허가 ⑦ 우주개발의 시정(是正) ⑧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되며 당연직 부위원(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민간인원을 포함한 16인으로 구성



II. 우리나라 우주전략 거버넌스

1. 현황

■ 정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우주전략의 소관부처로서 우주개발 정책 사업을 집행
- 산업통상자원부 : 항공우주산업법에 근거하여 우주산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등 관련 정책을 추진
- 국방부 : 우주영역은 국가안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우주기반 감시정착체계, 초소형 위성, 군위성통신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

관련법령	목적	소관부처
우주개발진흥법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 *국가우주위원회, 전문기관 지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 *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 연구기관

- 정부출연기관인 항우연을 중심으로 천문우주과학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KAIST 인공위성센터 등이 참여

II. 우리나라 우주전략 거버넌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컨트롤 타워 부재

-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이 과기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21. 8)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비상설기구라는 다부처 참여와 부처 간 조정에도 한계
- 우주산업, 우주외교, 우주 안보 및 국방 등 빠르게 변하는 다양한 우주이슈에 대처하는데 어려움

■ 연구개발과 산업정책의 연계 미흡

- 뉴스페이스 시대의 도래는 우주가 탐구의 대상에서 수익이 되는 산업의 대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
- 우리나라 우주정책은 과기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부처의 특성상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연구개발이 후 사업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우려

II. 우리나라 우주전략 거버넌스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관련 인력 부족,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 다양한 우주관련 이슈를 정부의 국단위(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국)에서 소화하에는 부족함이 있음.
- 우주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순환보직 등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우주이슈에 대한 대처, 국제간 우주협력 및 정책일관성 확보에 어려움.

■ 우주전담 조직 필요

- 국가의 우주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산업진흥, 국가안보, 국제협력, 인력영성 등 여러 부처의 우주개발 관련 정책들을 종합·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필요

Ⅲ. 우주전담조직 설립에 관한 쟁점

Ⅲ. 우주전담 조직에 관한 쟁점

1. 사안별 쟁점

■ 형태

- 정부행정조직 구성 (우주청 신설)
- 상설 국가우주위원회
- 우주개발전문기관에 기능과 역할 위임

■ 소속

- 대통령 및 국무총리실 (정부간 조정 능력 극대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은 과학기술 관점에서 평화적 목적이 중요)
- 산업통상자원부 (우주는 새로운 성장동력)
- 국방부 (우주는 중요한 국방영역)

■ 입지

- 대전 (과학기술의 요람)
- 사천 (항공산업단지)

Ⅲ. 우주전담 조직에 관한 쟁점

2. 정부기관 입지에 관한 고려사항

■ 국가균형발전

-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이전
-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 유치하는 것은 어려움.

■ 업무효율성

-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한 입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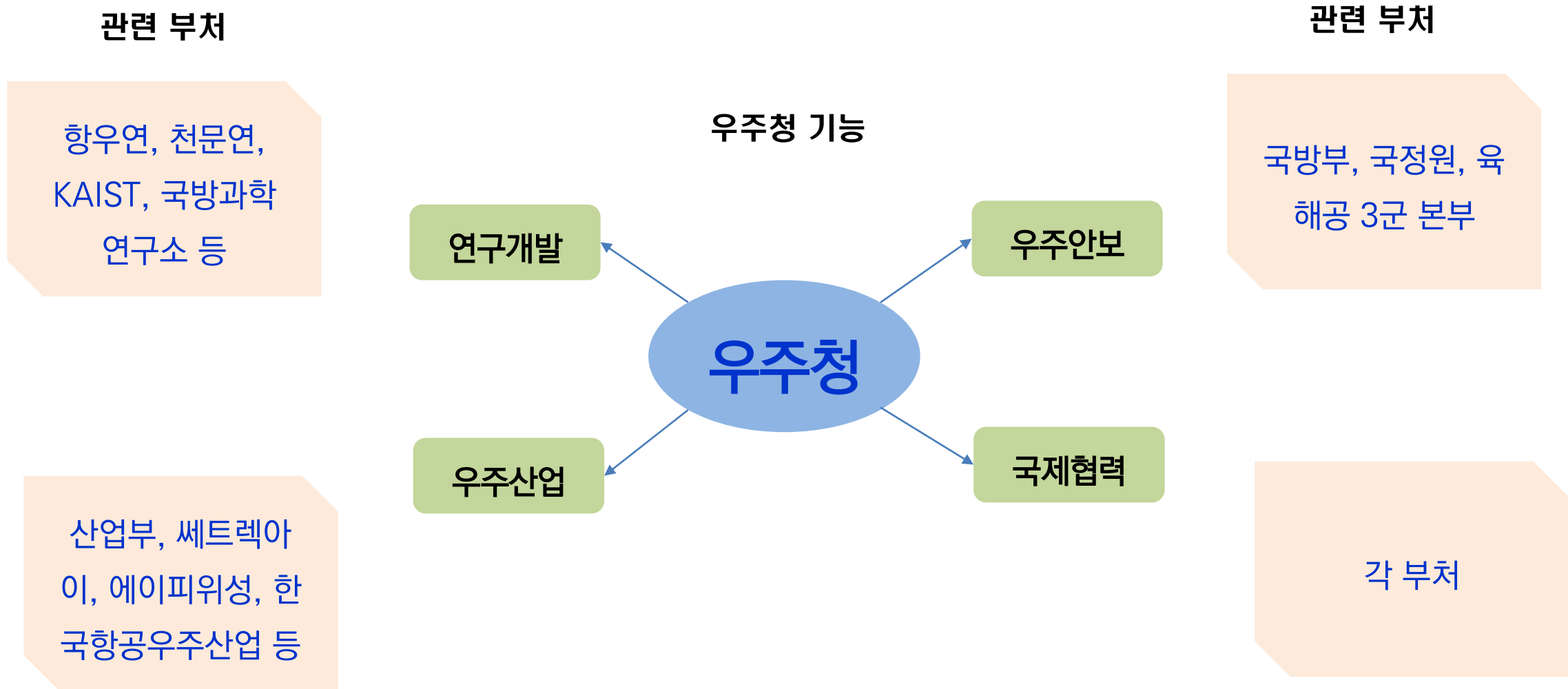
*해양수산부 사례

-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부에서 분리, 신설되면서 청사 위치를 부산시에 두는 방안이 고려
- 행안부는 청와대·국회와 세종청사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업무 비효율과 행정공백이 심각한 가운데 해수부를 부산으로 보낼 경우 비효율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세종시로 정함.

Ⅲ. 우주전담 조직에 관한 쟁점

2. 정부기관 입지에 관한 고려사항

■ 업무효율성



Ⅲ. 우주전담 조직에 관한 쟁점

2. 정부기관 입지에 관한 고려사항

■ 업무효율성 : 주요 관련 부처가 거리

(Km)

소재지	부처	대전	사천	고흥
세종	국무총리실	23.7	218.8	269.2
	산업통상자원부	22.9	218.4	268.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2.7	217.8	268.3
서울	국방부	164.1	345.5	382.9
	국가정보원	149.0	333.6	371.0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1	201.7	253.6
	국방과학연구소	11.8	203.8	254.2
	한국천문연구원	6.4	200.6	258.6
계룡	육·해·공 본부	21.0	203.6	243.7
평균		47.52	238.20	285.54

Ⅲ. 우주전담 조직에 관한 쟁점

2. 정부기관 입지에 관한 고려사항

■ 우주산업 클러스터

- 클러스터 동종 기업간의 직접뿐만 아니라 정책기관, 관련 연구기관 간 지리적 밀접을 포함한 개념
- 기업과 정책 및 연구기관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 대면접촉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혁신에 필요한 암묵적 지식과 노하우의 접근이 수월(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우주관련 기술과 산업이 클러스터를 형성 여부가 우주청 입지에 중요한 고려사항

* 산업단지 ≠ 클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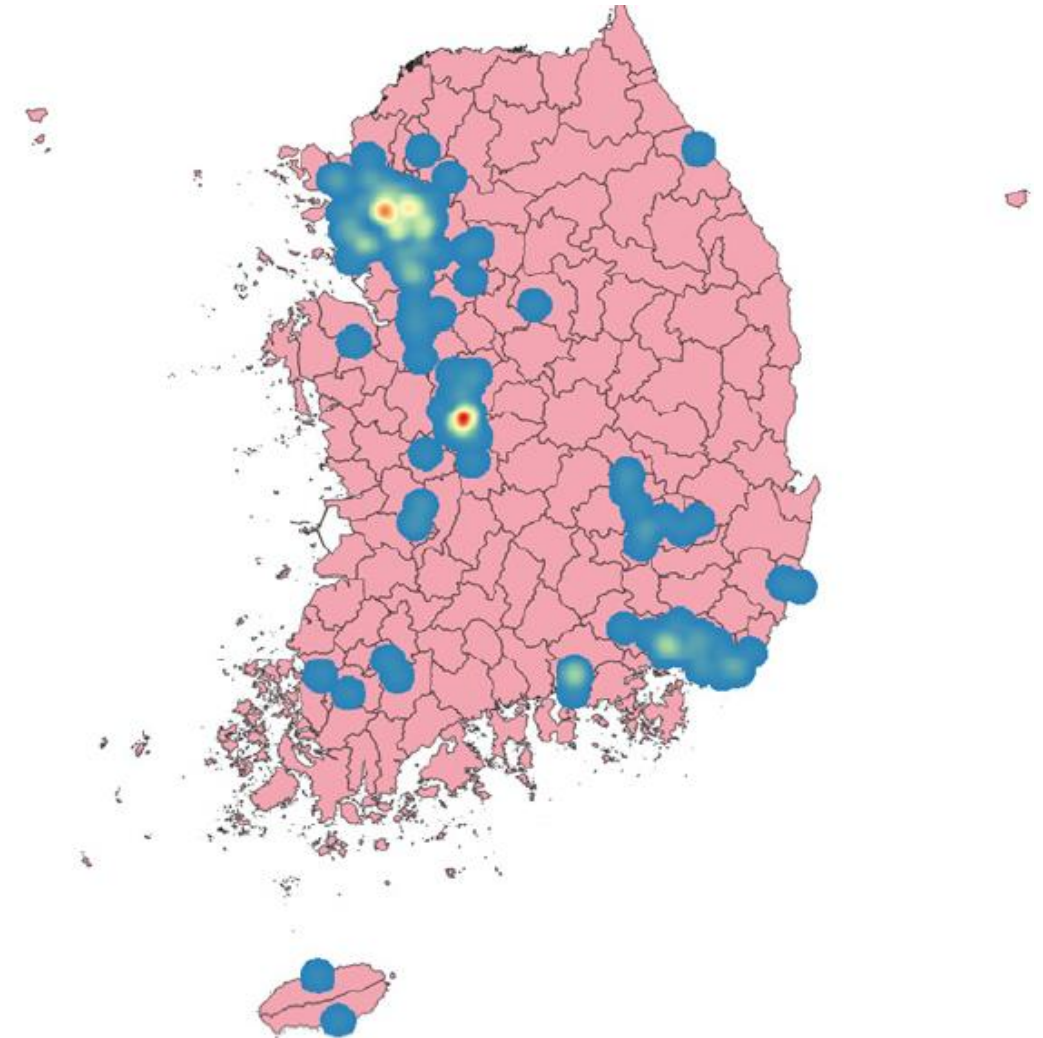
Ⅲ. 우주전담 조직에 관한 쟁점

2. 정부기관 입지에 관한 고려사항

■ 우주산업 클러스터 - 사업체 현황

(개)

구 분	밀집지역	제조업	서비스업	기업수
서울 특별시	가산디지털단지과 구로디지털단지 일대	7	20	27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6	19	25
경기도	성남시(판교)	5	11	16
	안양시	6	8	14
	안산시와 시흥시 일대	9	2	11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일대	9	3	12
대전 광역시	유성구와 대덕구 일대	34	14	48
경상남도	사천시	10	-	10
	창원시	13	2	15
전체	합계	99	79	178



- 전국 우주산업 기업 현황(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 기업이 밀집되어 있을수록 적색으로 표시

Ⅲ. 우주전담 조직에 관한 쟁점

■ 우주산업 클러스터 - 연구기관 현황

(개)

지역	기관수	비중
- 수도권	8	23.5
- 충청권	17	50.0
(대전)	(13)	(41.9)
- 영남권	3	17.6
- 호남권	2	5.9
- 강원권	-	-
- 제주권	1	2.9

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우주산업 실태조사」를 재구성

Ⅲ. 우주전담 조직에 관한 쟁점

2. 정부기관 입지에 관한 고려사항

■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

- 우주청 특성상 기술직·연구직 인력의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이 빠르게 발전하는 우주산업 기술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 필요
- 따라서 우주전담조직 소재지의 중요한 요건은 해당 지역에서 관련 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가능하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능이 갖춰져 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항공우주학과 개설 대학 현황>

지역	대학교
서울	서울대학교,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부산	부산대학교
인천	인하대학교,
대전	KAIST, 충남대학교
경기도	한국항공대학교
경상남도	경상대학교

Ⅲ. 우주전담 조직에 관한 쟁점

2. 정부기관 입지에 관한 고려사항

■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

(명, 개)

구분	대전	전남(고흥)	경남(사천)
전체 졸업자수	32,174	15,225 (-)	23,295 (251)
이공계 졸업자수	17,360	8,638 (-)	13,941 (251)
학공우주학과 개설 대학	2	0 (-)	1 (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1 상반기)

주1 : 졸업자수는 대학과정, 대학원과정, 전문대학과정을 포함함

주2 : 이공계는 공학계열, 의학계열, 자연계열을 포함

III. 결론

■ 우주 탐구의 대상에서 산업, 국방, 외교의 중심으로 등장함에 따라 우주청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음.

- 가까운 미래에 우주는 국가전략의 중요한 분야로 부상하며 연구개발, 안보, 산업, 국방 등 여러 분야와 연계성도 강해질 것으로 예상
- 관련 이슈의 다양화와 전략적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전담하는 정부조직의 신설이 필요

■ 우주청 입지는 국가균형발전, 업무효율성, 산업클러스터 및 전문인력 공급 및 양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공간의 측면에서 우주청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
- 우주청의 주요 기능이 연구개발, 산업진흥, 국방, 국제협력 분야로 예상되므로,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고려한 입지가 선택되어야 함.
- 우주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이 밀집된 지역과 인접한 지역이 적절
- 우주청은 그 특성상 전문직, 연구직 인력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지역에서 전문인력의 공급, 양성 등이 가능한지 검토

감사합니다.